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南相祐 (KDI국제대학원 교수)

관치금융·정경유착과 취약한 기업재무구조가 부실을 초래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나라 경제의 주된 생산주체는 기업이므로 구조조정 없이 국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부와 은행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심판자로서 필요한 <룰>을 만들고 이를 집행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로 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도대체 우리 기업과 은행들이 부실 덩어리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관치금융의 유산과 정경유착 및 부패라고 하겠다. 경제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은행여신을 산업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은행의 자율성과 상업성은 크게 저해될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초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된 후에도 정부의 정책금융과 지시금융이 은행의 핵심역할인 여신심사기능을 대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이나 금융혁신은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능력보다 정치권 혹은 고위 인사와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고 믿을 때, 은행의 상업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는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무리한 사업확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재무행태는 주어진 환경에서 기업이 나름대로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업만을 탓할 수는 없다. 금리규제에다 세금경감등 투자유인이 주어지고 땅값이 뿔박질하는 상황에서는,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대단치 않더라도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富를 축적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뭘하고 있었느냐고 물을 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과 정치권 등의 압력이다 大馬不死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보편화된 가운데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는 당면한 외환위기 자체가 부실을 크게 증가시켰다. 96년이래 우리 수출여건과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데다, 동남아의 금융·외환위기, 막대한 단기외채에 비해 부족한 외환보유고, 무리한 환율방어 노력 등이 위기를 초래하였다. 큰 폭의 환율절하와 금리상승으로 기업과 은행의 차입금 상환부담이 일거에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기업 퇴출결정 및 구조조정에서 채권은행의 주도적 역할 미흡

경제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이 심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퇴출·정리하고, 이들을 부실에 이르게 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은행-기업관계를 중심으로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난 6월에 55개의 퇴출기업들이 발표되었다. 은행과 정부의 합작품이다. 은행에만 맡겨서는 되지 않으니 정부가 간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자신의 운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잠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은행 구조조정을 좀더 서둘렀더라면 이런 문제는 완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경우도 상호지급보증은 물론 부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한다면 부실계열사가 계속 연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들어 정부가 나서서 다그치는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은행과 기업들은 매우 소극적이다. 부실이 깊어지기 전에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조체제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부실기업정리나 「워크아웃」실적에 연계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정부보다는 채권은행이고, 아무리 구조조정이 시급하더라도 그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계는 우리 구조조정의 속도와 폭 못지 않게 얼마나 시장을 존중하는 구조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대외신뢰를 상실한 것은 경제자체의 취약성 보다도 우리의 반시장적 행태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치권이 먼저 제기한 「빅·딜」이나 일률적인 부채비율 인하 역시 마찬가지다. 「빅·딜」에 장애가 되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하되 그 추진은 기업과 채권은행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채비율인하도, 금융기관들이 여신공급과 금리 결정 등에 있어서 기업 재무구조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여 유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우리 경제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진단한 이상, 부실의 치유과정에서 새로운 유착과 정부간여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물론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게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정부가 채권은행의 역할을 대신 할 경우 공정성과 특혜의 시비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하루 빨리 은행-기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의 모색: 구조조정을 계기로 결속관계 강화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정부는 여신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들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을 정하도록 하였다. 주거래은행은 기업신용 및 경영정보의 관리와 재무구조의 개선, 부동산취득 및 기업투자의 규제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의 억제, 전문화의 촉진 등을 도모해왔다. 부실화된 기업을 처리하는 일도 맡도록 되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산업합리화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주도의 기업정리가 추진될 때 인수후보 기업을 선정하여 일차적인 인수조건을 협의하는 일이 거의 전부였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의 자율경영이나 은행-기업간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데 제약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감독·피감독의 관계로서, 감독규정의 준수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결속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일본의 Mainbank나 독일의 Hausbank 등에서 볼 수 있는, 은행과 고객기업과의 장기적인 결속관계는 잠재적인 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제은행으로서, 또한 다른 채권은행들을 대신한 위임된 감시자 (delegated monitor)로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서 고객기업에 대한 (경제 전체의) 정보관리·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상호주식보유 등을 통해 은행이 기업내부자의 위치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차입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고객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할 때 최종대부자로서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한다. 물론 은행-기업간의 밀접한 결속관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는 배타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관계로서 종종 불공정하고 비경쟁적인 행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나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은행과 기업이 시장을 통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arm's length market relation) 영국·미국형의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시장이 경쟁적이고 정보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회계·감사·공시·신용평가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 극히 미흡하다. 증권시장은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발전정도가 낮고 내부자거래·가격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이해상충의 남용과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신용분석을 행하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외환·자본자유화가 크게 진전된데다 재무구조개선이 발등의 불이 됨에 따라 일부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자조달이 확대되고, 국내에서도 은행차입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과의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중상위권 이하의 재벌기업등 대기업과 우량한 중견기업이라고 하겠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위험성이 커서 감시활동에 대한 수익기대가 높지 않은데다 회계상의 불투명성, 경영자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감시가 쉽지 않다. 이러한 성격상 앞으로 상당 기간 은행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희생가능성이 큰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의 일환으로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은행차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기업들도 경영권안정에 더욱 신경을 쓰게됨에 따라 은행의 고객기업 주식보유가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채권자로서만이 아니고 주주로서 고객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으나 희생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주도적으로 구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경우 자연스럽게 채권은행과 기업의 주주 및 경영진간에 비용·책임분담과 구조조정방안(워크아웃)이 마련되고, 정부가 기업퇴출 결정이나 채권금융기관간·협조에 간여할 소지도 없어질 것이다.

필자 약력

서강대학교 상학사(1970)

미국 M.I.T. 경영학 박사(1978)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1978~97)

경제부총리 자문관(1982~83)

세계은행(IBRD) 이코노미스트(1986~88)

KDI 부원장(1990~93)

KDI 국제교류협력센터 소장(1994~97)

KDI 국제대학원 교수(1998~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 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551-3334/7 Fax: 551-3339
 E mail: IGENET@chollian.dacom.co.kr